

# ‘수주절벽’ 건설업계, 인력·조직 ‘칼바람’ 조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간 해왔던 수주나 매출(목표) 설정보다는 현행 인력이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먼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대형건설사 A사 임원

#“올해 수주가 크게 줄면서 준공 현장 인력의 재배치 문제가 걱정이다. 앞으로도 신규 현장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 슬림화 작업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한다.”

중견건설사 B사 임원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올 연말 건설업계에 인력과 조직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칠 것인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건설수주 감소세가 올해 더욱 심화되면서 대형사는 물론 다수의 중견사들도 인력과 조직 슬림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의해 주

시장침체 수입원 급감 전망

조직 슬림화·재편 움직임

중견사까지 구조조정 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꺾일 듯

택, 부동산 등 민간부문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데다 SOC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공공부문 수주까지 급감하면서 업체마다 자체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8월 누계 건설수주(경상)는 82조14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150억원(약 7.87%)이나 줄었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같은 기간 누계 수주액도 1년 새 8.2%나 급감했다.

해외수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달 기준 올해 해외수주액은 222억9885만달러로 정부 목표인 300억달러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 2010년(716억달러)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수주는 향후 건설경기를 가능하는 선행지표이자 건설사가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수주가 줄면 조직이나 인력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업계의 구조조정 움직임은 이미 대형사, 해외(플랜트)부문부터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대우건설은 이달 초 플랜트부문 정직원 1200명에 유급휴가를 시행했다.

여타 대형사들도 해외부문을 필두로, 주택이나 공공부문 등까지 조직 슬림화와 인력 감축을 위한 유·무급 휴가나 명예퇴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삼시적인 구조조정체계를 가동중이지만 올해 수주나 내년 이후 경기 전망이 예상보다 훨씬 나쁜 수준이다 보니, ‘몸집’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권기자 skbong@ ▶2면에 계속

## 1면서 계속 = ‘수주절벽’ 건설업계, 인력·조직 ‘칼바람’ 조짐

중견 이하 건설사들도 감축 고민에 빠졌다. 중견사들이 주력하는 주택(민간)이나 공공부문을 비롯해 민간투자시장까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업체 상당수가 기존 조직과 인력 운용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계열사 등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고, 몇몇은 올 연말을 전후해 자체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통계청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은 최근 건설업의 고용지표가 구조조정을 가리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대비 줄어드는 추세지만, 9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6만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2~3년 주택시장 호황으로 인한 입주물량 증가와 대규모 토목공사들의 준공시점이 다가오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계속 늘어났다”면서 “그러나 앞으로의 건설투자 전망이나 수주감소 등 선행지표를 고려하면 취업자 수는 가파른 감소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만명을 훌쩍 넘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10년 평균(172만명) 대비 30만명 이상 많은 수준으로, 경기여건을 고려하면 ‘포화’ 상태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시장의 급랭 방지나 적정 규모의 SOC 투자 확대 등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업계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포함해 취업자 수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방송권기자

건설산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인건비가 10년간 크게 올라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증가한 노무비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공사비 산정방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가별 소득수준과 건설기능인력의 인건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숙련기능인력의 시간당 인건비는 33.75달러, 일반기능인력 인건비는 22.5달러로, 비교 대상국 101개 중 21위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건설공사비 산정 전문기관인 COMPASS의 ‘세계 건설비용 자료집’을 활용한 것으로, 10년 전인 2009년 조사치에 비해 숙련공은 3.1배, 일반공은 2.5배로 상승했다. 당시 조사에서 숙련공의 시간당 인건비는 11달러로 41위, 일반공은 9.05달러로 33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단순히 인건비가 2~3배 올랐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건산연은 국가 소득수준(1인당 GDP) 대비 기능인력들의 올해 인건비를 비교한 결과 1인당 GDP 3만~4만달러 그룹에 속한 11개 국가들의 평균 숙련공 인건비는

### 숙련공 시간당 인건비 ‘33.75달러’ 101國 중 21위… 선진국 수준 도달 임금 지급하는 업계 사정은 ‘악화’ 10년간 영업이익률 10분의 1로 ‘뚝’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구축 시급”

35.02달러, 일반공 인건비는 22.74달러로 한국 건설근로자들의 인건비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윤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2018년 1인당 GDP 전망치는 3만7370달러로, 이 그룹의 평균 인건비 및 지수와 비교하면 소득수준에 비해 인건비 수준이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다 소득수준은 높지만 인건비(숙련공 기준)가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와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4개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자국 건설근로자의 부족으로 대부분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계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탓에 인건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올랐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건설업계 사정은 악화를 거듭해 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10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2014~2017년 준공된 공공 발주공사의 37.2%가 공사비가 부족해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건설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5%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설업황의 상반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승한 인건비를 공사비에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도 건설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인건비 상승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한국과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의 10년간 인건비 상승률이 1.2~1.3%인 것에 비해 국내 기능인력 인건비 상승률이 월등하게 높다. 그러나 공사비는 10년째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권성중기자 kwon88@